

양파 같은 한빛원전, 감춘 것 또 드러났다

방사능 외부 유출량 더 늘어나...추가 은폐 의혹 베타선 방출 핵종인 '3중 수소' 유출량 집계 안해 원전 "미처 확인 못했다...기준치 이내 유출" 변명만

한빛(영광)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출된 방사능 성분조차 규정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엉뚱한 밸브를 잠그는 여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데 이어, 지역민들의 안

전을 위협하는 유출된 방사능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대기중에 퍼진 방사능 성분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한빛원전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전 측은 지난 17일 원전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으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집계해야 할 '3중 수소'(三重水素·트리튬) 유출량 집계를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3중 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로, 호흡계통과 피부로 흡수된 뒤 물처럼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포 조직에 붙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 물질이다.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암 등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3중 수소 양을 집계하도록 고시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측은 해당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경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혀 3중 수소 유출량을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이 이번 사고로 발표한 방사능 유출량에 3중 수소를 제외한 만큼 대기중에 유출된 방사능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 지난 21일 원안위와 민간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밝혀지면서 뒤늦게 공개, 인정했다. 원전 측은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유출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의무 위반"

이라고 인정했다. 원전측은 또 "유출된 방사능 양도 늘어나겠지만 기준치 이내"라며 "앞서 외부로 유출된 방사능 집계량을 토대로 유추해서 3중수소 외부 유출량을 계산한 뒤 사고 경위 등을 원안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법이 규정하는 극히 위험한 방사능 물질인 3중수소 집계조차 하지 않고도 숨긴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잡은 가동 중단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위해 광주시, 안전정책관 파견 등 대책 마련 착수

전남도와 공동대응체계 모색

광주시가 잡은 가동 중단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정책관을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한빛원전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남도와 원전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빛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 시 안전정책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시민 보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불안을 없애고자 한빛원전과 실시간으로 운전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원전 측에 보낼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는 또 전남도와 민선 6기 상생정책으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공동으로 '원자력 지킴이'를 구성하고, 원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지원 시스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광주시장 주재로 환경단체와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방안 보고회'를 열고 향후 원전 안전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장학기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인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규명 약속지킴이 돼 달라”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4·16 약속지킴이 제안자들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노란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산구, 건축 비리 2건 추가 확인 파문 확산

'100억원 특혜' 건축주에 2년전에도 규정 어긴 사업 허가 광주시 '허가 부당' 의견에도 구청 처리 방향 안밝혀 혼선

광주시 광산구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한 후폭풍이 심각하다. 규정보다 상가 건축물 허가 규모를 대폭 늘려주는 행정으로 '사업주에 100억원대 특혜를 준' 행정이라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지역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건설중인 상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광주일보 10월 22일자 7면>

특히 광산구는 '건축 허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광주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입장과) 다르지만 위법하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광산구 장덕동 1105번지 일대 1만1977㎡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동일한 절차로 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상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광산구 장덕동 1601번지 도시형 생활주택(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광산구 수완동 937번지 도시형 생활주택(6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 2 곳으로, 광주시가 수립한 '수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아 '상가 건축물의 경우 세대당 6㎡, 최대 5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장덕동 상가 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면적(500㎡)을 넘어선 규모(1094㎡)로 승인이 나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수완동 상가 부지도 지난 6월 795㎡ 규모로 허가를 받아 건설중이다. 관련 규정보다 훨씬 넓은 규모로 상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당 건축주가 분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당 부지 일대 상가 분양 가격이 통상 3.3㎡당 800만(2층)~2000만원(1층)이라는 점에서 상가 건축주에게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될만하다. 공교롭게 최근 논란이 된 장덕동 1105번지 일대 상가와 지난 2012년 승인이 이뤄진 장덕동 1601번지 건설사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산구는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광산구 장덕동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광산구 건축 허가는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광주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처리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광산구는 "광주시 답변은 '위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광산구는 "광주시 입장을 받아 우선, 해당 건설사에 '일시 공사중단'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측근 협박 금품 요구범 구속영장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종진)는 23일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윤시장 측근에게 "윤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뢰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며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시장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등 윤 시장 측에서 활동한 뒤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다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유사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윤 시장과 유권자단체 대표가 공모해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내용을 토대로 윤 시장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A씨는고발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기도 하다. /김지율기자 dok2000@

인건비 허위 청구 9억 빼돌려 건설사 소장 등 3명 붙잡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9)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6년간 허위 청구한 인건비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억원을 빼돌려 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발주한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현장을 담당할 건설사 직원들로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일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

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영장 '심하네'

경찰이 음주단속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과잉 대응 논란. ○...23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밤 9시50분께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음주단속 현장에서 50m 떨어진 도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법정형(1년 이하)이 낮아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기동 제일아 매매”

- 29평 - 12층, 전체 올수리, 주거겸 사무실
매매가 7200만원
- 77평 - 20층,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2억 7000만원
- 주인직매 : 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